

「 2021년 1월 16일 시행 」

제27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번호	
성명	

문제 책형
A

【인문사회계열 : 선택과목】

선택유형	선택과목 (1)	선택과목 (2)	선택과목 표기 (○)
1	행정학	민법총칙	
2	행정학	형사소송법	
3	행정학	경제학	
4	행정학	소방학개론	
5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6	민법총칙	경제학	
7	민법총칙	소방학개론	
8	형사소송법	경제학	
9	형사소송법	소방학개론	
10	경제학	소방학개론	

※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선택하신 선택과목 (1), 선택과목 (2)이 시험지의 선택 과목(1), 선택과목 (2) 및 답안지의 선택과목 (1), 선택 과목 (2)가 동일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답안지는 원서접수 시 선택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소방청

【 행정학 】

1. 미국 행정학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이먼(Simon)은 초기 행정학의 과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리 실증주의 방법에 의한 행정 원리의 도출을 주장하였다.
- ② 뉴딜(New Deal)정책을 통해 행정부의 역할과 규모가 확대되면서 정치와 행정의 구분은 비현실적인 것이 되었다.
- ③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 운동은 기존의 능률 지향적이고 가치중립적인 행정학의 적실성 부족을 비판하면서 가치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 ④ 정책과학은 사이먼의 행태주의와 의사결정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서 수학과 컴퓨터를 활용하여 고도의 계량적인 접근 방법을 추구하였다.
- ⑤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기업가적 정신 등 사기업 경영원리의 도입을 추구하였다.

2. 신공공관리론에서 중요시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과의 기준과 측정
- ② 투입보다 산출 강조
- ③ 고객 지향적인 정부
- ④ 분권적 정부
- ⑤ 공유재의 비극

3. 공무원의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적으로 부여된 직무 수행상의 의무와 사인으로서 개인의 이익 간의 충돌이다.
- ② 잠재적 이해 충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③ '회피'를 통하여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
- ④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차를 두고 이해 충돌이 부패행위로 발현될 수 있다.
- 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기관 자문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4. 다음 중 조직과 환경 간의 관계에 관한 관점이 다른 이론은?

- ① 테일러(Taylor)의 과학적 관리론
- ② 베버(Weber)의 관료제론
- ③ 셀즈닉(Selznick)의 흡수(cooptation)이론
- ④ 메이요(Mayo)의 인간관계론
- ⑤ 버나드(Barnard)의 조직관리론

5. 직업공무원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의 안전성, 계속성,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다.
- ② 전통적 관료제의 구성 원리와 부합하는 인사제도이다.
- ③ 채용 당시의 직무수행 능력이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보다 중요시된다.
- ④ 주로 계급제, 폐쇄형 공무원제를 기반으로 하며 일반행정가의 양성을 추구한다.
- ⑤ 공직 수행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봉사정신과 행동규범을 보장할 수 있다.

6. 포스트모더니즘을 적용한 행정 연구에서 강조되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대주의적 세계관
- ② 구성주의(constructivism)
- ③ 합리주의와 과학주의
- ④ 탈실증주의(post-positivism)
- ⑤ 타자성(alterity)

7. 조직이론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독립변수를 특정하고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해 제한된 범위 내의 일반성과 규칙성을 발견한다.
- ② 대리인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고 전제한다.
- ③ 거래비용이론에서 거래비용이란 탐색비용, 이행 및 감시비용 등을 포함한다.
- ④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을 환경에 의존하는 피동적 존재로 본다.
- ⑤ 조직군생태론의 분석단위는 단일조직이 아니라 조직군이다.

8. 다음 중 OJT(On-the-job Training)의 프로그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턴십(internship)
- ② 직무순환(job rotation)
- ③ 역할 연기(role playing)
- ④ 실무지도(coaching)
- ⑤ 임시배정(transitory experience)

9. 역량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추측이나 유추가 아닌 직접적 관찰을 통해 역량을 평가한다.
- ② 성과에 대한 외부 변수를 통제하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 ③ 다양한 실행과제를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 ④ 다수의 평가자가 합의를 통해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개별 평가자의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⑤ 성취된 업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피평정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0. 다음 중에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어 조직내 인간을 도외시하고, 조직의 비인간화, 인간성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는 이론이 아닌 것은?

- ① 테일러(Taylor)의 과학적 관리론
- ② 패이올(Fayol)의 산업관리론
- ③ 굴릭과 어윅(Gulick & Urwick)의 행정관리론
- ④ 베버(Weber)의 관료제론
- ⑤ 아지리스(Argyris)의 성숙-미성숙이론

11. 조직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전구동형 조직의 핵심은 상급자의 명령에 의한 조직운영이다.
- ② 프로세스 조직모형에서 경영관리의 핵심은 팀제이다.
- ③ 네트워크 조직모형에서는 외부조직과도 수평적 연계관계를 구축한다.
- ④ 학습조직은 지식을 창출·획득·확산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폐기하는 데에도 능숙한 조직이다.
- ⑤ 팀조직에서 구성원들은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12. 근무성적평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표식 방법은 연쇄적 효과(halo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 ② 강제배분법을 사용하면 관대화(leniency tendency), 집중화(central tendency)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 ③ 기관의 전체 평정대상자를 대상으로 직급별 평정 등급 및 평정점을 정할 때 강제배분법이 적용될 수 있다.
- ④ 다면평가는 능력의 개발이나 목표의 성취보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치중하게 할 수 있다.
- ⑤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상급자가 하급자의 실적 기준으로 사용할 목표를 지시·설정해 주고 일정 기간 동안 목표의 달성 수준을 평가한다.

13.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 2요인이론에서 위생요인이 아닌 것은?

- ① 작업조건
- ② 보수
- ③ 승진
- ④ 동료와의 관계
- ⑤ 직업의 안정

14. 전통적 예산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개의 원칙은 예산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② 사전 의결의 원칙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입법부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③ 통일의 원칙은 정부의 회계장부가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④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회계와 목적세는 예산 통일의 원칙의 예외이다.
- ⑤ 한정성의 원칙에 의하면 예산은 지정된 목적 외에 사용이 금지된다.

15.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예산안편성지침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각 중앙관서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가 취합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정부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16. 국가의 정부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이는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이 있다.
- ② 제한경쟁입찰은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여 경제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 ③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따라 특정 다수인을 지명해 경쟁시키는 방법은 담합의 여지가 존재 한다.
- ④ 수의계약은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⑤ 정부가 체결하는 공법상의 계약이므로 민법상 계약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7.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 대상별로 분류·편성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파악할 수 있다.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업무 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해 편성한다.
- ③ 영기준 예산제도는 과거의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 ④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
- ⑤ 계획예산제도는 정보와 의사결정권한이 과도하게 중앙집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18.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의 전용은 입법과목인 장·관·항 사이의 상호 융통으로 반드시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한 것이다.
- ③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하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 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이후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편성하는 것이다.

19.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위정부의 참여자로서 이익집단, 관료조직, 회의 위원회가 포함된다.
- ② 정책공동체에는 하위정부모형의 참여자 이외에 전문가집단이 추가된다.
- ③ 정책공동체에서는 참여자의 전문지식으로 갈등 없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 ④ 이슈네트워크에서는 참여자들의 진입 및 퇴장이 매우 쉬운 편이며, 네트워크의 경계가 불명확하다.
- ⑤ 이슈네트워크에서는 전문지식과 정보를 많이 보유한 행위자들의 이해가 최종 정책 산출에 많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20. 정책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정책학습을 단기적이고 급진적인 정책변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으로 본다.
- ② 정책흐름모형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 변동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③ 정책패러다임 변동모형은 패러다임 변동으로 정책 목표와 정책수단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 ④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은 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위상변동이 정책 내용의 변동을 가능케 한다고 본다.
- ⑤ 단절균형모형은 정책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21.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방법에서 정책집행의 성공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인과 관계를 확보해야 한다.
- ② 정책 대상집단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법령과 지침이 필요하다.
- ③ 정책이 정책집행 현장의 상황에 맞게 적응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④ 결정된 정책에 대해 다수의 이해관계 집단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
- ⑤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정책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22. 정책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대안을 채택한다고 본다.
- ② 만족모형은 미래에 발생할 현상을 예측하고 모든 대안을 검토한 후, 가장 만족스러운 대안을 채택한다.
- ③ 쓰레기통모형은 정책문제, 문제의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 등의 요소가 개별적으로 떠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교차되면 정책결정이 된다고 본다.
- ④ 최적모형은 기존의 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직관적 판단에 의한 결정도 중요하다고 본다.
- ⑤ 회사모형은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의 회피, 조직의 학습,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23.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 모형 중 정책집행자의 권한이 가장 강한 유형은?

- ① 협상형(bargainers)
- ② 관료적 기업가형(bureaucratic entrepreneur)
- ③ 고전적 기술자형(classical technocrats)
- ④ 지시적 위임형(instructed delegates)
- ⑤ 재량적 실험가형(discretionary experimenters)

24.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허즈버그(Herzberg)는 작업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만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매슬로우(Maslow)는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욕구의 퇴행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 ③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형 인간 및 아지리스(Argyris)의 성숙모형의 인간은 허즈버그(Herzberg)의 위생요인에 의해 동기부여 받을 가능성이 높다.
-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는 노력이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expectancy),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instrumentality), 보상에 대한 주관적 선호(valence)의 세 가지 요인이 동기부여 정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 ⑤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서는 보상의 절대적 크기가 클수록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느낀다고 주장한다.

25. 지방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간 균형화와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 ②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한다.
- ③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정치적 의도나 정책적 의지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규모를 예측하기 힘들다.
- ④ 특별교부세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정부에 교부할 수 있다.
- ⑤ 2015년 1월 1일부터는 분권교부세를 폐지하여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 민법총칙 】

1.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② 비법인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③ 이사가 결원인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 ④ 비법인사단에 있어 구성원인 사원이 없게 되면 곧바로 사단이 소멸하므로 더 이상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⑤ 비법인사단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대표권의 제한을 거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2.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 ②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⑤ 「민법」은 임시총회의 소집을 위한 정족수를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정관으로 이 정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보다 감소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민법」 제103조에 따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박을 위한 것이라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고, 대역자가 그 동기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금전 소비대차약정
- ②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매매
- ③ 채무의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얻게 될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 ④ 당사자의 한쪽이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를 과하는 법률행위
- ⑤ 친권자변경의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친권자를 재변경할 경우 위자료를 두 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친권자변경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

4. 친권자 甲이 미성년자 乙을 대리하여 丙과 체결한 乙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에 따라 공박으로 인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乙이 얻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는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였어야 한다.
- ③ 계약금을 지급한 丙이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丙은 이제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 ④ 丙에게는 공박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존재하였어야 한다.
- ⑤ 후에 성년자가 된 乙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 매매계약은 유효로 될 수 없다.

5.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사가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후 퇴직금을 변제공탁하였는데, 그 근로자가 공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한 후 8개월이 지나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다.
- ②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이란 당사자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가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 ⑤ 백화점의 부도로 인해 그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된 사정을 잘 알면서 오로지 자신이 백화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할 목적으로 백화점이 발행한 약속어음 20장을 액면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할인·취득하고, 그 약속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6.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적자치의 원칙상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 ②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④ 사람이 출생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 ⑤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밖에도 보통실종선고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로서만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7.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
- ②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③ 대리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미성년자가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가 소유한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이 미성년자에게 유리하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는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8. 甲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은 甲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③ 甲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 ④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법원은 甲에 대한 한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⑤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후라도 甲의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9.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생존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② 법원이 권한을 정하지 않고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乙을 선임한 경우, 乙은 법원의 허가 없이 甲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 ③ 甲이 권한을 정하지 않고 乙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甲의 생사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 乙은 법원의 허가 없이 甲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 ④ 甲이 별도의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⑤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권한초과처분허가를 받아 그 허가의 내용에 따라 甲의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위 부동산 처분은 유효하다.

10.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도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 ②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실종기간은 항공기의 추락을 행정청이 확인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③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만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살아서 돌아온 경우에는 실종선고의 효과가 당연히 소멸한다.
- ⑤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상태로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의 특별실종기간이 적용된다.

11. 다음의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과 통정하여 자신의 X부동산에 허위로 乙 명의의 가등기를 해 두었다. 그 뒤에 甲은 다시 X부동산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바람에 丙의 등기가 직권말소되었고, 이후에 乙은 위 통정허위표시 사실을 알지 못한 丁에게 다시 X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① 甲은 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② 丙은 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③ 丙은 丁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丁은 X부동산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다.
- ⑤ 乙에게 가등기해 준 X부동산을 甲이 丙에게 다시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므로, 그 이전등기는 타인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1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② 취소가 제한되는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을 의미한다.
- ③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
- ④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착오가 있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알았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볼 수 없다.
- ⑤ 채무자란이 백지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은 甲이 채무자는 乙이라고 생각하여 서명날인했는데, 실제로는 丙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13. 다음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자신의 소유인 X토지 인근에 혐오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乙의 거짓정보 제공에 속아, 마침 공장을 신축할 부지를 찾고 있던 丙에게 X토지를 급히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丙은 丁으로부터 공장신축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로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① 乙에게 甲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가 없더라도, 甲은 사기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乙의 기망사실을 丙이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甲은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乙의 사기를 이유로 한 甲의 매매계약 취소가 유효한 경우, 丁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甲은 丁에게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④ 甲이 丙에게 X토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도하였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甲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한능력자를 상대방으로 한 의사표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지만, 제한능력자는 도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③ 「우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면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④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따라서 그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5.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컴퓨터를 사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면 이러한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라고 약속한 경우에 약속 당시 이미 그 시험에 합격했다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④ 기한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가 미정인 동안에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6.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간의 계산에 있어 초일을 산입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 ② 2001년 11월 11일 15시에 출생한 자는 2020년 11월 10일 24시가 지나면 성년이 된다.
- ③ 12월 25일이 금요일인 경우, 12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전화요금은 1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④ 3월 31일부터 기산하여 1달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4월 30일이 경과하면 기간이 만료한다.
- 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집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17.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② 권리자가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③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④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경우에는 의무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18.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⑤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19.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 ③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는 경우라도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당사자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 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대리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0. 복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②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 ③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⑤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21.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125조에서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② 대리권 소멸 후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경우, 그 대리행위가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인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술을 써서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대리행위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 ⑤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대리행위로의 직접 효과가 귀속되기 위하여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행위한 사람에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한다.

2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추인은 대리행위 이후에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다.
- ② 추인을 하게 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 ③ 추인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명시적·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 ④ 추인은 단독행위이므로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⑤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3. 주물·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고, 동산에 한정되지 않는다.
- ② 건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다.
- ③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④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제100조는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 ⑤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을 처분할 때에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

24.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ㄴ.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ㄷ.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매매계약은 유효로 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5.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이 행사된 때로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②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상대방에게 현존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
-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주인은 그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 ④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성년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면 더 이상 미성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 형사소송법 】

1.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토지관할의 기준인 현재지에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 ②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대등한 관계이므로 양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 ③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은 고등법원의 합의부가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 ④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 ⑤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기피신청에 따른 소송진행의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정지되지 않는다.
- ② 해당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 소송절차의 경우에는 정지된다.
- ③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사정은 소송진행정지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변론 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지만, 원심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 ⑤ 기피신청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형사소송법」상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86조가 준용된다.
- ② 주거·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편에 부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데 이때 우편물은 발송한 때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 ④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⑤ 송달영수인에 관한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신체구속을 당한 자란 당해 형사사건에 구속된 자를 말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4. 친고죄에서 고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 ②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③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인정된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다.
- ④ 고소취소는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한다.
- ⑤ 고소취소는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 작성만 있으면 고소취소로 볼 수 있다.

5.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③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④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범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심검문 대상자에게는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한다.
- ② 경찰관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흥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 ③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나 당시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하여 동행한 사람을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는데 이는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⑤ 동행의 경우 오로지 대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이 인정된다.

7.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②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다.
- ③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이다.
- ④ 증거보전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⑤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8.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유인자가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아니하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한 사정만으로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③ 수사기관이 범행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⑤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라 볼 수 없다.

9.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재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데 재항고인이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 후 재항고인의 변호인이 재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을지라도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라고 볼 수 없다.
- ②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③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여기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도 족하다.
- ⑤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10.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한다.
- ②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당해사건의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그 증언을 번복하게 하여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 ⑤ 공소제기 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들어 당해 수소법원이 판단하여야 한다.

11.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하면서 공소사실 등을 예비적·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 ② 법원의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다.
-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는 없다.
- ④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실제적 경합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⑤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12.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법원은 검사의 의견표명이 있기 전에 보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 ②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적정하다고 하여도,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그 결정을 취소한다.
- ③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④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결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 ⑤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집행유예 결격자라면 보석이 불가능하다.

13. 「형사소송법」상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에는 구금은 물론 구인도 포함된다.
- ② 법원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⑤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4.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의 연령이나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빈곤 기타 사유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진행한 공판절차는 위법하다.
- ④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판결만의 선고도 할 수 없다.
- ⑤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함께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을 위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다.

15. 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 한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 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②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공소장을 변경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한 자백은 객관적 합리성과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 ③ 자백에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경우에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④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16.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임을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도 법원은 다른 사정의 고려 없이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죄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
- ③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④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
- 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17.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분별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그 전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 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상황을 초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 ㄷ.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환문코자 하였으나 외무부로부터 현재 일본 측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양국 형법체계상의 상이함을 이유로 송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그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경우
- ㄹ.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 받고도 특별한 사정 없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ㅁ.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8. 증거동의를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 ③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 ④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 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증거동의도 효력이 인정된다.
- ⑤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은 출정하지 않고 변호인이 출정한 경우에는 증거동의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9.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조사는 필요하다.
- ③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 절차가 이루어졌고 임의로 작성된 것이 인정된다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甲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대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 ① 피고인 甲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 甲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③ 약식명령에 대한 甲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실효된다.
- ④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 甲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 甲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 ⑤ 피고인 甲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21.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③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을지라도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실제 진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 ③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 ⑤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후행범죄)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아니한다.

2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의 상한을 선고할 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은 부정기형의 단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②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라도 제1심에서는 청구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검사의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④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제1심 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보다 더 긴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⑤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제1심 징역형의 선고 유예를 변경하여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4.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변호인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도 그 공동피고인은 제3자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다.
- ③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 ④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

25.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배심원은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 ④ 국민참여재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의 특칙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재판이기 때문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을 경우, 절차는 위법하지만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경제 학 】

1. 경제학자들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계의 생계비를 과대평가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로 타당한 것은?

- ① 소비자 물가지수는 모든 재화가 아닌 특정한 상품들만의 가격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 ② 소비자 물가지수는 가격변동이 심할 때는 적절한 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 ③ 사람들은 소득이 변하면 다른 재화를 구매하기 때문이다.
- ④ 사람들은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구매량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 ⑤ 사람들은 앞으로의 가격변동을 예상하고 소비하기 때문이다.

2. 경기가 침체될 때 유효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케인즈(Keynes)의 주장에 의하면 다음 중 정부지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 ① 사람들의 소비성향이 강할 때
- ② 사람들의 소비성향이 약할 때
- ③ 기업의 생산성향이 강할 때
- ④ 기업의 생산성향이 약할 때
- ⑤ 사람들의 소비성향은 약하고, 기업의 생산성향은 강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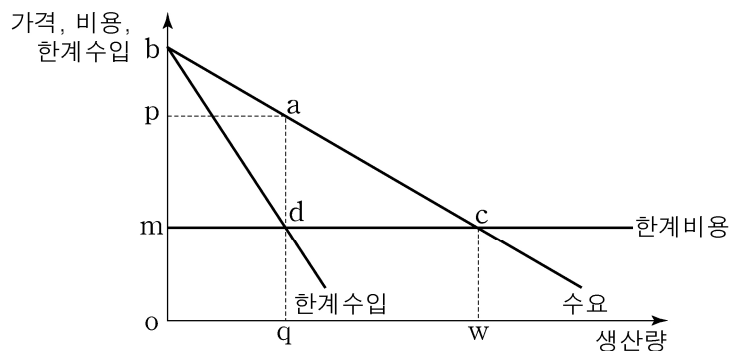
3. 재정수지가 적자인 정부가 민간시장에서 차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 민간 대부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재정수지 적자는 대부자금에 대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 ㄴ. 재정수지 적자는 대부자금에 대한 총공급을 증가시킨다.
- ㄷ. 재정수지 적자는 대부자금 시장의 이자율을 높인다.
- ㄹ. 재정수지 적자는 대부자금 시장의 이자율을 낮춘다.
- ㅁ. 재정수지 적자는 민간의 대부자금 수요를 구축한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ㄴ, ㅁ
- ⑤ ㄹ, ㅁ

4. [그림]은 어떤 산업의 독점기업의 생산 활동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고정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 ① 독점기업의 이윤은 사각형 padm이다.
- ②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bap이다.
- ③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는 점 d에서 이루어진다.
- ④ 만약 이 산업이 완전경쟁이면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acd이다.
- ⑤ 만약 이 산업이 완전경쟁이면 생산자 잉여는 없다.

5. [표]에서 각각의 괄호는 A항공과 B항공 두 회사의 전략에 따른 A항공의 이윤과 B항공의 이윤을 차례대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A항공이 높은 가격전략을 사용하고 B항공이 높은 가격전략을 사용하면 A항공의 이윤은 8억, B항공의 이윤은 5억이 된다. 이 게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B항공	
		높은 가격	낮은 가격
A항공	높은 가격	(8억, 5억)	(5억, 10억)
	낮은 가격	(7억, 5억)	(3억, 3억)

- ① 이 게임의 내쉬균형은 두 회사가 모두 높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이다.
- ② 이 게임의 내쉬균형은 두 회사가 모두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이다.
- ③ 이 게임은 죄수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다.
- ④ A항공의 우월전략은 없다.
- ⑤ B항공의 우월전략은 없다.

6. 두 재화만을 생산하는 한 경제를 가정할 때 이 경제의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볼록한 일반적인 형태를 갖는다면, 그 원인으로 옳은 것은?

- ① 이 경제가 효율적인 생산상태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 ② 자원의 일부가 특정 재화에 대해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③ 이 경제가 가지고 있는 특정 재화에 대한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 ④ 특정 재화에 대한 이 경제의 선호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 ⑤ 특정 재화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그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감소하기 때문이다.

7. 국내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25로 알려져 있다. 이때 현재 담배 1갑이 5,000원이고 정부가 국민들의 담배 소비를 20% 줄이도록 유도하려 한다면, 담배 1갑의 가격을 얼마로 인상해야 하는가?

- ① 6,000원
- ② 7,000원
- ③ 8,000원
- ④ 9,000원
- ⑤ 10,000원

8. A기업의 장기 총비용(TC)이 아래와 같을 때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불경제를 구분하는 생산규모(Q)는?

$$TC(Q) = 500Q - 48Q^2 + 2Q^3$$

- ① 8 ② 10 ③ 12
- ④ 14 ⑤ 16

9.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기적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이 가능하다.
- ② 장기적으로 독점적 경쟁기업의 독점력은 유지될 수 있으나 경제적 이윤은 영(0)이다.
- ③ 독점적 경쟁시장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제품의 다양성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
- ④ 독점적 경쟁시장의 제품들은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매우 낮다.
- 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다.

10. 케인즈(Keynes)의 균형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 한계소비성향이 0.75이고, 정부지출과 조세가 모두 1,000억 원씩 증가했다면, 균형국민소득은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 ① 0원
- ② 500억 원
- ③ 1,000억 원
- ④ 1,500억 원
- ⑤ 2,500억 원

11. A국은 완전한 자본이동이 가능한 소규모 개방경제이며, 현재 무역수지가 균형상태에 있다. 다수의 주요 외국 정부가 자국의 정부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현상으로 옳은 것은?

- ① A국의 무역적자 발생
- ② A국의 균형실질환율 하락
- ③ 해외에 투자될 A국 통화의 공급 감소
- ④ A국의 국내투자 증가
- ⑤ 세계이자율의 하락

12. 1인당 생산함수가 $y = k^{1/2}$ 일 때 저축률과 자본의 감가상각률이 각각 0.4와 0.1이라면, 안정상태의 1인당 생산량은? (단, k 는 1인당 자본량이다.)

- ① 1 ② 2 ③ 3
- ④ 4 ⑤ 5

13. 최근 외국의 고급자동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변동환율제 하의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 모형을 이용하여 이러한 변화를 분석했을 때, 순수출과 총소득에 대한 영향으로 옳은 것은?

- ① 순수출은 감소하고 총소득은 불변이다.
- ② 순수출은 감소하나 총소득은 증가한다.
- ③ 순수출은 불변이고 총소득은 감소한다.
- ④ 순수출과 총소득 모두 감소한다.
- ⑤ 순수출과 총소득 모두 불변이다.

14. 고용 통계가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취업자 500만 명
• 실업자 50만 명
• 비경제활동인구 450만 명

- ① 실업률은 10%이다.
- ② 고용률은 50%이다.
- ③ 경제활동참가율은 55%이다.
- ④ 1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이다.
- ⑤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450만 명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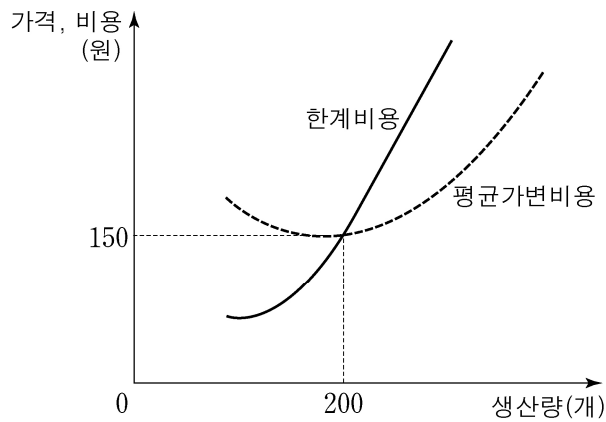
15.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부는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수요 증가 정책 (가)을/를 사용하기로 했다. 통화당국도 이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늘리는 (나) 정책을 전개하기로 했다.

- | (가) | (나) |
|-------------|----------|
| ① 법인세율 인상 | 지급준비율 인하 |
| ② 소득세율 인하 | 국채 매입 |
| ③ 정부지출 증가 | 국채 매각 |
| ④ 이전지출 확대 | 기준금리 인상 |
| ⑤ 부가가치세율 인하 | 지급준비율 인상 |

16. 양말의 공급 곡선은 $P = \frac{1}{3}Q$ 이다. 양말의 수요 곡선이 $P = -Q + 80$ 에서 $P = -Q + 120$ 으로 이동했다.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은?
- ① 450 ② 600 ③ 750
 ④ 1,200 ⑤ 1,350

17. [그림]은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단기비용 곡선이다. 이 상품의 시장 가격이 170원일 때 이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생산량은 200개이다.
 ②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③ 평균가변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크다.
 ④ 균형점에서 한계비용은 170원이다.
 ⑤ 균형점에서 한계수입은 170원보다 크다.

18. 근로자 1인당 임금이 월 100만 원이고 1인이 월 5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의 임대료는 월 220만 원이다. 이 기업이 제품을 월 20개 생산할 때 평균비용은?
- ① 5만 원 ② 11만 원 ③ 16만 원
 ④ 20만 원 ⑤ 31만 원

19. 경제적 선택에서 인간의 심리적, 감정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경제학이 생겨났으며, 이 경제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카너먼(Kahneman)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이 경제학이 제시한 이론은?
- ① 전망 이론
 ② 생애주기 이론
 ③ 효율적 시장 가설
 ④ 자연실업률 가설
 ⑤ 합리적 기대 가설

20. 다음은 A국의 2020년의 소비 지출(C), 투자 지출(I), 정부 지출(G), 순수출(X_n), 조세 납부액(T)이다. A국의 2020년의 균형국민소득과 투자 승수로 옳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이고, 물가는 불변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 = 200 + 0.8(Y - T)$ • $I = 600, \quad G = 100, \quad X_n = 100$ • $T = 1,000$

	균형국민소득	투자 승수
①	800	2
②	800	5
③	1,000	4
④	1,000	5
⑤	1,200	4

21. [표]는 우리나라 A기업의 전년 대비 대미(對美) 수출액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기업은 단일 재화만 수출하며, 원화 표시 가격은 불변이다.)

구분	t년	t+1년	t+2년
원화 표시 수출액(%)	0	10	0
달러화 표시 수출액(%)	10	10	-10

- ① 원/달러 환율은 t년보다 t+2년이 낮다.
- ② 수출량은 t-1년보다 t+2년이 10% 적다.
- ③ 수출량은 t년보다 t+1년이 많다.
- ④ 달러화 표시 수출액은 t년과 t+2년이 같다.
- ⑤ 원화 표시 수출액은 t년보다 t+2년이 작다.

22.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재와 Y재는 모두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르며, X재와 Y재는 연관재 관계이다. • 2020년 10월에 X재와 Y재의 균형 가격은 각각 P_1, P_3였다. • 2020년 11월에 X재의 공급이 변동하여 X재와 Y재의 균형 가격이 각각 P_2, P_4가 되었으며, X재와 Y재의 거래량은 모두 증가하였다.
--

- ① X재와 Y재는 대체재 관계이다.
- ② P_1 은 P_2 보다 높다.
- ③ P_4 는 P_3 보다 낮다.
- ④ 2020년 10월 대비 11월의 X재 판매 수입은 증가하였다.
- ⑤ 2020년 10월 대비 11월의 Y재 판매 수입은 감소하였다.

23. [표]는 A국과 B국의 2020년 수출 의존도와 수입 의존도를 나타낸 것이다. A국과 B국의 2020년 상황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국과 B국은 상호 간에만 교역을 한다.)

구분	A국	B국
수출 의존도(%)	40	15
수입 의존도(%)	30	20

<보 기>	
ㄱ.	GDP는 B국이 A국의 2배이다.
ㄴ.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 A국이 B국보다 많다.
ㄷ.	A국의 순수출액은 양(+)의 값으로 GDP의 10%이다.
ㄹ.	B국의 민간 소비 지출, 민간 투자 지출, 정부 지출의 합은 GDP의 95%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4. [표]는 A국의 2020년 9월과 10월의 경상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위 : 억 달러)

구분	9월	10월
경상 수지	-12	39
상품 수지	50	46
서비스 수지	-14	-11
본원 소득 수지	-43	12
이전 소득 수지	-5	-8

- ①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포함되는 항목의 적자액은 10월이 9월보다 적다.
- ② 채권 거래 금액이 포함되는 항목은 9월과 달리 10월에 적자를 기록하였다.
- ③ 해외 무상 원조 금액이 포함되는 항목은 9월과 10월 모두 흑자를 기록하였다.
- ④ 재화의 수출액은 9월이 10월보다 많고, 재화의 수입액은 10월이 9월보다 많다.
- ⑤ 9월과 달리 10월의 경상 수지는 달러화 대비 A국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25. 과점시장 내 개별 기업이 상대방의 현재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경쟁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는?

- ① 쿠르노(Cournot) 경쟁
- ② 베르뜨랑(Bertrand) 경쟁
- ③ 카르텔(Cartel)의 모형
- ④ 슈타켈버그(Stackelberg) 모형
- ⑤ 굴절 수요 곡선 모형

【 소방학개론 】

1. 자연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열축적이 용이할수록 자연발화가 쉽다.
- ② 열전도율이 높을수록 자연발화가 쉽다.
- ③ 발열량이 큰 물질일수록 자연발화가 쉽다.
- ④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자연발화가 쉽다.
- ⑤ 표면적이 넓을수록 자연발화가 쉽다.

2. 화재하중을 산출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가연물의 배열상태
- ② 가연물의 질량
- ③ 가연물의 단위발열량
- ④ 목재의 단위발열량
- ⑤ 화재실의 바닥면적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시설의 설비 분류가 다른 것은?

- ①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② 연결송수관설비
- ③ 연결살수설비
- ④ 연소방지설비
- ⑤ 무선통신보조설비

4. 하인리히(H. W. Heinrich)의 도미노 이론의 5단계 중 사고의 직접원인이 되는 3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유전적 요소
- ② 불안정한 행동
- ③ 사회적 환경요소
- ④ 인적, 물적 손실
- ⑤ 개인적 결함

5.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 ④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⑤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이고, (ㄴ)은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이다.

ㄱ

ㄴ

- | | |
|--------------|------------|
| 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 ②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 ③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 ④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 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① 도로터널 사고 - 행정안전부
- ②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 산업통상자원부
- ③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 해양경찰청
- ④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⑤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소방청

8. 가연물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독성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산화탄소(CO)는 인체 내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의 운반기능을 약화시켜 질식하게 한다.
- ② 시안화수소(HCN)는 질소성분을 가지고 있는 섬유류가 불완전연소할 때 발생하는 무색의 맹독성 가스로서 청산가스라고도 불린다.
- ③ 염화수소(HCl)는 염소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염화비닐수지, 전선 피복 등이 연소할 때 발생하며, 물에 녹아 염산이 된다.
- ④ 브롬화수소(HBr)는 방염수지류 등이 연소할 때 발생하며, 상온·상압에서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다.
- ⑤ 아크로레인(CH₂CHCHO)은 석유제품·유지류 등이 연소할 때 발생하며, 공기와 접촉하면 아크릴산이 된다.

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수납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주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 ②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 ③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 ④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 ⑤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및 “충격주의”

10.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과 펌프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은?

- ① 프레저사이드 푸로포셔너(Pressure-side Proportioner)
- ② 프레저 푸로포셔너(Pressure Proportioner)
- ③ 라인 푸로포셔너(Line Proportioner)
- ④ 펌프 푸로포셔너(Pump Proportioner)
- ⑤ 압축공기포 혼합장치

11. 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 ② 인산염류 소화약제
- ③ 중탄산염류 소화약제
- ④ 고체에어로졸화합물
- ⑤ 팽창질석·팽창진주암

12.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 ㄴ.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 ㄷ.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 ㄹ.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 ㅁ.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① 수용인원이 200명인 박물관
- ② 지하층에 있는 바닥면적이 300 m²인 영화상영관
- ③ 바닥면적 합계가 1,000 m²인 한방병원
- ④ 바닥면적 합계가 6,000 m²인 물류터미널
- ⑤ 바닥면적 합계가 10,000 m²인 농수산물공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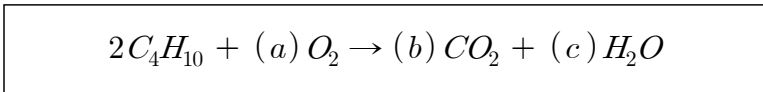
14.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수구조대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화학구조대
- ㄴ. 수난구조대
- ㄷ. 산악구조대
- ㄹ. 고속도로구조대
- ㅁ. 지하철구조대
- ㅂ. 테러대응구조대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ㅂ

20. 부탄(Butane)이 완전 연소할 때의 연소 반응식이다.
 $a+b+c$ 의 값은?



- ① 10 ② 17 ③ 24
- ④ 31 ⑤ 36

21.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고온의 노(爐)가 설치된 장소
- ②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③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 ④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 ⑤ 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 m 미만인 부분

22. 밀폐된 구획공간에서 이산화탄소 방사 시 산소농도를 10%로 설계할 때 방사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단, 소수점은 올림 처리한다.)

- ① 15% ② 24% ③ 35%
- ④ 45% ⑤ 53%

23. 제6류 위험물의 일반적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연성물질로 산소공급원 역할을 한다.
- ② 증기는 유독하며 부식성이 강하다.
- ③ 물과 접촉하는 경우 모두 심하게 발열한다.
- ④ 비중이 1보다 크며 물에 잘 녹는다.
- ⑤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이다.

24. 옥내소화전설비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 ① 연성계
- ② 물올림장치
- ③ 압력챔버
- ④ 순환배관
- ⑤ 스트레이너

25.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을 (㉠) 감지기라 하고,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 감지기라 한다. 이들 두 감지기의 성능을 겸한 것으로서 두 성능 중 어느 하나가 작동되면 화재신호를 발하는 것을 (㉢) 감지기라고 한다.

- | <u>㉠</u> | <u>㉡</u> | <u>㉢</u> |
|------------|----------|----------|
| ① 정온식 스포트형 | 차동식 스포트형 | 보상식 스포트형 |
| ② 정온식 분포형 | 차동식 분포형 | 열복합식 |
| ③ 차동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 보상식 스포트형 |
| ④ 차동식 분포형 | 정온식 분포형 | 열복합식 |
| ⑤ 차동식 감지선형 | 정온식 감지선형 | 열연복합식 |